

장학금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분석

장학금, 뇌물이 될 수도 있다

- 장학생 선발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하면 운영기관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chosun.com 사회

뉴스홈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스포츠 연예 전국 문화 라이프 영상·포토

법조 ▾

대법원 "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 제공한 것도 뇌물"

송원형 기자

입력 2016.03.21 11:35

대법, 'STX에 아들 장학금 요구' 혐의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집유 확정

[뉴스시스] 입력 2016.03.21 06:06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자격제한조건

- 장학생 선발 조건, 확인하기도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다



chosun.com 사회 지면 PDF

뉴스홈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스포츠 연예 전국 문화 라이프 영상·포토 콘텐츠관 | 랭킹뉴스

사회 일반 ▾ **성범죄 피의자를 모범청소년 선정, 장학금 준 경찰서**

조선일보 | 김윤주 기자

입력 2019.07.26 03:54 | 수정 2019.07.27 00:20

4
17

피해자 어머니가 靑에 환수 청원... "범죄 경력 조회했어야" 비판에 靑 "현행법상 안된다"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chosun.com 사회 지면 PDF보기 구독

뉴스홈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스포츠 연예 전국 문화 라이프 영상·포토 콘텐츠관 | 랭킹뉴스 오늘의

사회 일반 ▾ **외교관 자녀가 재외동포? 엉뚱한데 장학금 퍼준 동포재단**

조선일보 | 안준용 기자 ▶) 본문듣기

입력 2019.07.26 03:43

6
22

동포사회 이끌 인재에 줘야할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장학금, 한국서 살 학생들에게 지급돼 감사원 "제대로 된 기준 마련하라"

방송통신대와 함께

민감한 정보 요구

- 장학금 신청서, 선발과정, 방심하면 인권 침해 위험 있다.

chosun.com 사회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건강 포토·영상

사회 일반 ▾ **인권위 "장학금 신청 대학생 사진 제출 요구는 용모차별"**

오경록 기자

입력 : 2017.12.18 09:40

5 2 ...

"부모 학력·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교육부 등에 관리·감독 권고

chosun.com 사회

뉴스홈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스포츠 연예 전국 문화 라이프 영상

사회 일반 ▾ **교수, 신입생들에게 "부모 직업·직장 적어내라"**

안별 기자

입력 2019.05.01 08:55

1

서울 한 대학 교수가 신입생들에게 부모님 직업·직장·직급 등을 적으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A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항목들은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상관없는 내용이다"며 "무조건 써야 한다는 의도는 아니었다. 가정환경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원 학생을 선정할 때 고려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부족한 생활비

대학생 채무자, 수는 적지만 차이는 큰 현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 전국 대학생 2,417명(할당추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1%가 부채를 지고 있었다. <서울대저널>이 서울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현재 부채를 지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 과/반 친구 중 한 명 정도는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의미다. 절대적으로 다수는 아니지만, 이들은 사회 진출의 첫걸음에서부터 부채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 부채의 유무와 가정의 경제적 형편, 대학에서의 인간관계 제한경험, 학점 간에 연관성이 포착됐다.

부채사유는 '내 등록금마련'이 51.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내 생활비 마련'이 31.0%로 그 뒤를 이었다. 부채가 있는 학생 집단과 없는 학생 집단의 평균 월 가구소득 차이가 두드러졌다. 부채가 있는 학생들의 평균 월 가구소득은 390±63만원, 없는 학생들의 평균 월 가구소득은 704±42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으면 인간관계(연애·과 행사·뒤풀이·사교활동 등)에도 제한을 받는 경향이 드러났다. 인간관계가 제한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채가 있는 응답자 중 51.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부채가 없는 응답자는 25.9%만이 그렇게 답했다.

학점평균과 부채유무간의 연관성은 학점평균 2.7을 경계로 두드러졌다. 부채가 없는 경우는 5.0%만이 학점평균 2.7미만이라고 답했지만, 부채가 있는 경우는 20.0%의 응답자가 학점평균 2.7미만이라고 답했다.

132호 > 특집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살기 너무 팍팍해요!

학교 측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등록일 2015.05.30 01:35 | 최종 업데이트 2015.0

서울대생 넷중 한명 "돈 때문에 인간관계 어려움"

[중앙일보] 입력 2015.06.07 18:23

학자금 대출 문제

□ 학자금 대출 문제 → 낮은 취업률 → 신용유이자 위험 노출 → 사회생활 어려움의 악순환

-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간" 장학금 시장 확대 필요

"판사님, 대출받은 학자금 좀 깎아주세요"

조선일보 | 양은경 기자 신수지 기자

입력 2016.04.11 03:00

졸업 후에도 못갚아... 20-30대, 개인 회생·파산 신청 늘어

중앙일보

경제

뉴스검색

경제정책 산업 금융증권 부동산 과학미래 글로벌경제 고용노동

"잘못 살았나 싶다"...졸업과 동시에 '빚 수렁' 빠진 청년들

[중앙일보] 입력 2019.04.18 06:00 수정 2019.07.26 14:45



빚 59조 짊어진 청년은 실신세대 ... 100만원 꾸려다 5000만원 수렁에

[중앙선데이] 입력 2018.11.03 00:02 수정 2018.11.03 09:00 | 608호 10면 지면보기 ▶



'빚낸 청년' 급증... 커지는 캠퍼스의 한숨

조선일보 | 이민석 기자 안상현 기자

입력 2016.02.15 03:00 | 수정 2016.02.15 10:35

[불황 여파... 국립대 서울대마저 학자금 대출 42% 늘어]

- 졸업 후에도 못 갚아 빚더미

부모세대 조기퇴직 등으로 집에서 학비 지원 안 되고 취업까지 힘들어 악순환

chosun.com 사회 로그아웃 | 정보수정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건강 포토·영상

사회 일반 > "전세 사니? 월세 사니? 보증금은 얼마?" 한 고등학교의 황당한 생활 기초 조사서

이은정 기자

입력 : 2017.03.16 11:25

경기도 오산시 A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배포한 생활 기초 조사서./VTN 캡처

경기도 오산의 한 고등학교가 개학 후 학생들에게 집안의 재산 수준을 묻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려 했던 것이라며 즉각 사과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생 800명인 오산 A고등학교는 개학 직후인 지난 2일 학생들에게 '학생 생활 기초 조사서'라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했다.

이 가정통신문은 적절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파악한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문항 중 부모의 직업, 월세·전세 등 자가 형태, 차량 소유 여부 등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이 일부 포함됐다.

가정형편은 '상·중·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물론 매달 내는 금액까지 물었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가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항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상파악에 나서자 A고교는 이튿날 가정통신문과 일부 학생이 제출한 조사서를 모두 폐기했다.

학생기초조사관련 사과의 글

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늘 관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

3월 2일 배부된 학생기초조사서와 관련하여 조사서 내용에 학생에게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적게 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학기 초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담과 교육활동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학생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배부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월 2일 배부된 학생기초조사서는 담임 선생님들에 받지 않도록 지난 3월 3일 조치하였으며 혹 학생으로부터 서류를 이미 받은 것은 모두 폐기하였고 앞으로 학생기초조사서는 받지 않음을 학생 편에 안내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믿고 관심 가져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학생기초조사 관련 논란이 일자 A고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사과의 글./연합뉴스

A고교 측은 "학기 초 다양한 종류의 외부 장학금 추천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학년부장이 의욕이 앞서 이런 조사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별 상담을 하더라도 가정 상황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선의였다"며 "일부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A고교는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문제의 조사서를 만든 학년부장에게는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신고
Google 광고 ⓘ



최신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개인정보 묻는 학습환경조사서

오선영 조선에듀 기자

조선에듀 기사 작성일: 2017.03.15 10:12



“지나치게 사생활 캐물어 비인권적” vs “학생 지도에 필요한 내용”

자율 기재 학습환경 조사서

※ 아래 내용은 가정에서 학생과 보호자(부모님)가 함께 아이들의 지도와 관련하여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어주시는 내용들입니다. **※ 필수로 변경 시 별도 통보 부탁드립니다.**

인적 사항	학급	학년	반	생년월일	
	성명	(한글)		E-mail	
보호자 및 가족	성명	(한자)		학생전화번호	
	관계	성명		비상 연락처 및 기타 사항	
우리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	성명		학년/반		
	특기 또는 흥미		진료 희망	학생	학부모
진료 희망 사항	진료 희망 사유:				
	<p>※ 선생님께 바라는 말씀 ※ 학생의 건강 상태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등 선생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p>				
학습지도	생활습관/건강지도		기타 중요사항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조사서 양식 샘플

올해 고교생 학부모가 된 김민주(44·가명)씨는 입학식 후 아이가 받은 학습환경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를 보고 황당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가인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인지까지 적게 돼 있었던 것.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좋음’ ‘보통’ ‘매우 어려움’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게 돼 있었다. 김씨는 “요즘 시대에도 학교에서

올해 고교생 학부모가 된 김민주(44·가명)씨는 입학식 후 아이가 받은 학습환경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를 보고 황당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가인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인지까지 적게 돼 있었던 것.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좋음’ ‘보통’ ‘매우 어려움’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게 돼 있었다. 김씨는 “요즘 시대에도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알고 황당했다”며 “교육청에 항의하고 싶지만, 아이가 피해를 볼까 봐 참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몇 가지 항목을 빼고, 꼭 필요하다 싶은 내용만 적어 보냈다.

올해 처음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이지선(36·가명)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린이집에서 받은 환경 조사서에 부모 학력이나 직업은 물론 ‘(집에)방이 몇 개인지’까지 쓰게 돼 있더라”며 “불쾌해서 관련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 학기가 되면서 학부모 사이에 학습환경조사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부모 직업이나 학력, 종교는 물론 재산 정도까지 묻는 학습환경조사서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많다. 2012년 교육부가 ‘학생 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직업, 월수입(재산), 학력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듬해 필수 조사 항목을 보호자의 이름과 비상연락처로 한정된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조사서’ 양식까지 배포했음에도 여전히 비인권적 조사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한 차례 더 ‘학습 환경 조사서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 학교에 나눠주기도 했다. 중 2자녀를 둔 엄마 한정연(42·가명)씨는 “교육부가 따로 마련한 양식이 있는 줄 몰랐다”며 “담당교사가 과거 쓰던 조사서 양식을 매년 그대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 했다.

일부 학부모는 간소화된 학습환경조사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혼 후 혼자서 두 자녀(중 1· 초 5)를 키우는 엄마 정소희(41·가명)씨는 “보호자란에 아빠란을 비운 채로 보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반 아이들이다 알게 돼 아이가 한참 힘들어했다”며 “담당교사마저 (조사서를 본 뒤)아이에게 이혼을 언제 했는지, 아빠랑 연락하고 지내는지, 생활비는 누가 버는지, 지금 누구와 어디서 사는지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초 4자녀를 둔 정재현(39·가명)씨는 “아이 관심 분야나 학습, 건강 등에 대해 교사에게 알고 싶은 내용을 자율적으로 쓰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늘 몇 시간씩 고민한다”며 “아이 단점이나 않은 점한 등을 솔직하게 썼다가 공연히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와 달리 학습환경조사서가 (교육적 차원에서)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서연(40·가명)씨는 “지난해 한 지방 초등학교에서 입학 전 받았던 병명이나 학습 정도를 물어 논란이 됐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건강 상태나 (서로 다른) 입학 전 학습 정도는 교사가 알아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정환경 조사서 도움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초 2자녀를 둔 엄마 홍지연(39·가명)씨는 “아이에게 아토피로 인한 심한 가려움증이 있다고 적어 보냈다. 수업 시간에 여기저기 긁으며 주위를 방해할까 봐 걱정됐다. 다행히 선생님이 그런 점을 배려해서 잘 지도해줘 수업 적응에 도움받았다”고 설명했다. 초 3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 박미연(42·가명)씨도 “아이가 가벼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써 보냈다”며 “작년에도 학년 초 (아이 증세 때문에)친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 담당교사가 잘 중재해 줬다”고 말했다. 초 1자녀를 둔 학부모 이창연(39·가명)씨도 “아이가 입학 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며 “그래야 아이들 수준이나 학업 상태에 맞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학교나 교사의 주의·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허석우(45·가명)씨는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모 이혼’이나 ‘부모 동거’ 여부, 가정 형편 등도 (교육적 차원에서)교사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모·학생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비인권적 항목은 삭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철민(43·가명)씨는 “학부모는 가정 상황을 알렸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한다”며 “학부모가 우려하지 않게끔 교사·학교가 학습환경 조사의 취지를 잘 알리고,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